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모델 개발 방향과 정책 과제

도미향* · 백영숙** · 김응자***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의 영유아 교육·보육 공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 모델의 개발 방향과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 정책자료, 법령 및 행정통계를 분석하고, 국내 사례와 일본의 인정어린이원, 핀란드의 통합형 영유아 교육·보육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인구감소지역은 영유아 인구 감소와 어린이집 폐원 증가로 인해 교육·보육 접근성이 저하되고,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확대에 따라 영아 돌봄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립병설유치원의 유휴공간은 지역 내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공립병설유치원 유휴공간을 활용한 영아반 운영,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능 연계를 통한 상생형 운영체계 구축, 보육전문성 지원 강화, 지역거점형 운영체계 구축 및 단계적 시범 운영을 핵심 요소로 하는 운영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법·제도 개선, 공공 중심의 재정지원 확대, 전문인력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의 영유아 교육·보육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운영모델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모델,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지역거점형 운영체계, 공립병설유치원 유휴공간

논문 투고일 : 2026. 06. 21. 최종심사일 : 2026. 06. 23. 게재확정일 : 2026. 06. 24.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Paik Young Suk, Kwangju Women's University, 201, Yeodae-gil, Gwangsan-gu, Gwangju, Korea, 62357. E-mail : yspaik_2000@hanmail.net

I. 서론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과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지역소멸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2025)에 따르면 전국 89개 기초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들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 심화로 지역사회 유지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영유아 인구 감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교육·보육 서비스 접근성 저하와 돌봄 공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교육부(2025a)의 유아교육통계와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에 따르면 유치원 취원 아동 수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폐원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이 확대되고 있어 영유아 교육·보육 접근성 확보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영유아와 보호자의 교육·돌봄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정주여건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 활동 참여와 지역사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OECD(2021)는 양질의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가 교육격차 완화와 사회적 형평성 증진에 기여한다고 보고하였으며, UNESCO(2022)는 취약지역 영유아의 교육 접근권 보장을 국가의 핵심 책무로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공공보육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핵심 사회 인프라로 보았으며(김종해, 2020), 농산어촌 보육정책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윤경·서문희, 2020).

한편 정부는 유보통합 정책을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체계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교육부(2024)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영유아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고, 관계부처합동(2024)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교육·돌봄 서비스 접근성 확대와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교육·보육 문제를 단순한 기관 운영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재 영유아 교육·보육체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설치기준, 교직원 자격, 운영방식 및 재정지원 체계 등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제한된 영유아 수와 시설 운영의 비효율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집이 부재한 지역에서는 영아 돌봄 공백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최근 연구들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보육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김은설 외, 2021), 유보통합 관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협력모델 개발을 제안하였다(신나리·이경옥, 2021). 또한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 교육·보육기관 운영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운영모델 개발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박선영·정영희, 2022; 정선아·김혜진, 2023).

최근 유보통합 정책은 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은 영유아 수 감소와 기관 폐원이라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유보통합 운영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서는 영아의 교육·보육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공공 교육시설의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적 논의도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운영모델 개발은 유보통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보육 실태를 분석하거나 유보통합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운영모델과 실행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공립병설유치원의 유휴공간 활용, 영아반 운영, 보육전문성 지원, 지역거점형 운영체계를 통합적으로 제안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천 가능한 운영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의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 여건과 국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유보통합 정책과 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실천적 운영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보육 격차 완화와 영유아 교육·보육 접근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모델의 개발 방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모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는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인구감소지역과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 변화

우리나라는 저출생 현상의 장기화와 수도권 중심의 인구집중으로 인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감소지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2025)는 인구감소지역을 인구 감소율, 고령화 수준, 청년층 유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에서는 경제·사회적 기반 약화와 함께 교육 및 돌봄 인프라의 축소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육현장에서는 저출생과 유보 통합 정책 변화에 따른 운영 부담과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김경미, 2024), 이러한 변화는 인구감소지역의 교육·보육 운영체계 개선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영유아 인구 감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부(2025b)의 유아교육통계에 따르면 유치원 원아 수는 2020년 613,512명에서 2024년 521,794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2025)의 보육통계에서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2020년 약 124만 명에서 2024년 약 9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라 어린이집 폐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관 운영을 위한 최소 정원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영아 돌봄 공백과 교육·보육 접근성 저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는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서비스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정주 여건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김종해(2020)는 공공보육 서비스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 기능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이윤경과 서문희(2020)는 농어촌 지역의 보육정책이 시설 공급 확대 중심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최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및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관계부처합동(2024)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교육·돌봄 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교육·돌봄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는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정책 영역임을 보여준다.

2. 유보통합 정책과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모델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보육체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의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이원화 체계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설 기준, 교직원 자격체계, 운영시간 및 재정지원 방식의 차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의 비효율성과 지역 간 격차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김은설 외, 2021; 도미향 외, 2021).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2025b)와 보건복지부(2025)의 통계에 따르면 영유아 수 감소와 함께 유치원 원아 수 및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이 폐원하거나 설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은 부재하지만 병설유치원은 운영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으며, 영아 돌봄 공백 문제가 새로운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유보통합 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교육부(2024)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통해 영유아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교육·보육 격차 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제한된 시설과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기능 연계 및 자원 공유가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유보통합 운영체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김은설 외(2021)은 인구감소지역의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지역 중심의 통합 운영체계 구축을 제안하였으며, 신나리와 이경옥(2021)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협력모델 연구를 통해 공간, 인력 및 프로그램 공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선아와 김혜진(2023)은 인구감소지역 유아교육기관 운영 유형 분석을 통해 획일적인 기관 운영 방식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운영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최근에는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보육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정미라와 이경화(2023)는 병설유치원의 유휴공간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면서 영아반 운영을 포함한 통합형 운영모델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보육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김성기(2022)는 소규모 학교와 교육시설의 복합화를 통해 지역사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존 공공 교육 인프라를 활용

한 운영체계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의 사례 역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통합형 운영체계의 효과를 보여준다. 일본의 인정어린이원(Certified Center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은 유치원과 보육소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의 연속성과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으며(Nakamura, 2020), 핀란드는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형 영유아 교육·보육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22). OECD(2021)는 이러한 통합형 운영체계가 교육 형평성 향상과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종합하면, 인구감소지역의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은 단순한 기관 유지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보육 접근권 보장과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연구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통합 운영체계와 공공 인프라 활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병설유치원의 유희공간 활용, 영아반 운영, 보육전문성 지원, 행·재정 지원체계 및 지역거점형 운영체계를 통합적으로 제안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실천적 운영모델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본 연구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의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모델 개발 방향과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문헌고찰 및 정책분석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저출생 현상과 유보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의 최근 문헌을 중심으로, RISS, DBpia 등의 학술 데이터베이스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책연구기관(육아정책연구소 등)의 정책 보고서 및 행정 통계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체계, 유보통합 정책, 지역 맞춤형 교육·보육 운영모델과 관련된 국내외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및 정책자료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의 주요 쟁점과 운영모델 개발의 이론적 근거를 탐색하였다.

둘째, 정책 및 법령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4조를 중심으로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시행령과 지침을 검토하였으며, 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 등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국내외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의 학교복합시설 활용 사례와 유치원·어린이집 연계 운영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일본의 인정어린이원(Certified Center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과 핀란드의 통합형 영유아 교육·보육체계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은 운영 구조, 인력 배치, 시설 활용 및 지역사회 연계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인구감소지역에 적용 가능한 운영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일본을 선정한 이유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지방소멸 위기를 먼저 겪으며 유치원과 보육소를 통합한 '인정어린이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보육 공백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며, 핀란드와 프랑스는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사회에서 공공(지방정부) 중심의 보육 접근권을 어떻게 법적으로 보장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문헌 및 정책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여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과 관련된 주요 개념과 쟁점을 범주화하였으며, 이후 국내외 사례 간 비교분석을 통해 공통요인과 차별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모델의 개발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IV.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모델 개발 방향

1.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 여건 분석

인구감소지역은 저출생과 청년층의 지역 외 유출로 인해 영유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의 운영 여건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2025)에 따르면 전국 89개 기초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다. 2025

년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은 읍·면 568개 지역, 동 66개 지역 등 읍·면·동 단위에 서 총 634개로 나타났다(교육부, 2025b). 이는 2024년 기준 599개 지역에 비해 35개 지역이 늘어난 수치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1,427개 유치원 중 소규모(10명 이하) 유치원은 1,055개 (73.9%)에 해당한다(교육부 보도자료, 2026). 이렇듯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 내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통계청(2025)의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의 영유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영유아 수 감소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영유아 인구 감소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감소로 이어져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폐원 사례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교육부, 2025b). 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존 교육·보육기관의 운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2025)의 보육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인구감소지역 일부 읍·면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호자가 인근 지역의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위해 30분 이상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거나(최혜진 외, 2025), 적절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및 어린이집 미설치 수는 <표 1>과 같다.

<표 1> 전국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및 어린이집 미설치 수

전국 인구감소 지역 현황			어린이집 미설치 수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11
대구	3	남구 서구 군위군	7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9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20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40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46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62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80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109
경북	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120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13
합계		89	617

출처: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 및 교육부(2025b) 보육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자체별로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을 보면 경북이 120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 113곳, 전남 109곳, 전북 80곳, 충남 62곳, 충북 46곳, 강원 40곳, 경기 20곳, 부산 11곳, 인천 9곳이다(교육부, 2025b). 이러한 결과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의 지역 간 접근성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또한 영유아의 교육·보육 접근권 보장 측면에서 새로운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어린이집 운영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상당수의 공립병설유치원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유휴 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교육부, 2025a). 이는 기존 공공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병설유치원의 공간적 자원을 활용하여 영아반을 운영하는 방식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보육 공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인구감소지역은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어려움과 교육·보육 접근성 저하라는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반면, 공립병설유치원과 같은 기존 공공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모델 개발이 요구되며, 특히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2.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통합형 교육·보육 운영체계가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국내 사례인 경북 김천 울빛유치원 학교복합시설과 전북 부안군 변산초등학교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기존 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교육·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교육·보육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해외 사례에서는 일본의 인정어린이원(Certified Center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이 유치원과 보육소 기능을 통합하여 지역 내 교육·보육 공백을 완화하고 있었으며(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023), 핀란드와 프랑스는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형 영유아 교육·보육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22; OECD, 2022). 국내외 사례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국내외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 사례 분석 및 시사점

구분	운영 사례	주요 특징	인구감소지역 적용 시사점	운영모델 반영요소
국내	김천 울빛유치원 학교복합시설	유치원과 돌봄시설의 복합 운영, 공공시설 공동 활용	기존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돌봄 통합 운영 가능	지역거점형 운영체계
국내	부안 변산초등학교 병설어린이집	학교 유휴공간 활용, 영유 아 접근성 강화	소규모 지역의 보육 접근성 개선 가능	유휴교실 활용 영아반 운영
국외	일본 인정어린이원	유치원과 보육소 기능 통합 운영, 지역 특성 반영	유보통합 기반의 협력적 운 영체계 구축 필요	상생형 운영모델
국외	핀란드 통합형 영유아 교육·보육체계	지방정부 중심 통합 운영, 보편적 서비스 제공	공공 중심의 안정적 지원체 계 필요	공공 중심 운영체계
국외	프랑스 유아학교(Ecole Maternelle)	국가 책임 하의 조기교육 및 돌봄 지원	영유아 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 필요	행·재정 지원체계 구축

출처: 교육부(2023),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2023), OECD(2022), 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2022)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이들 <표 2> 사례는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관 간 경쟁보다 공공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통합 운영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3.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모델 개발 방향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 여건 분석과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모델을 제안하였다. 운영모델 제안의 구체적인 근거로는 전국 인구감소지역의 1,427개 유치원 중 소규모(10명 이하) 유치원이 1,055개(73.9%)로 막대한 유휴공간에 대한 통계 결과(교육부 보도자료, 2026)와 특례법(제74조)이라는 객관적 자원을 교차 분석한 결과이다. 제안된 운영모델은 인구감소지역의 영유아 교육·보육 접근성 향상과 돌봄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하며, 기존 공공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 단독 운영의 지속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집 미설치로 인한 교육·보육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공립병설유치원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유휴교실 활용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영아보육의 질 향상을 위

해서는 영아전문교육과정 운영과 교사의 전문성 강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 결과(도미향, 임화정, 민경아, 2023)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운영모델은 첫째, 기존 병설유치원의 유휴교실을 활용한 공간적 통합, 둘째, 영아 발달 특성을 고려한 보육전문성 강화, 셋째,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행·재정 지원체계 구축, 넷째, 부모교육 및 지역사회 연계를 포함한 지역거점형 운영체계 구축을 핵심 구성요소로 한다. 제안된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모델의 핵심 구성요소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모델의 핵심 구성요소

구성요소	주요 내용	기대효과
공간적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설유치원 유휴교실 활용 영아반 운영 • 기존 공공 교육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보육 접근성 향상 • 시설 운영 효율성 제고
보육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전문교사 배치 • 순회형 전문지원단 운영 • 교사 재교육 및 역량 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 보육의 질 향상 • 전문성 기반 교육·보육 제공
행·재정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지방자치단체 협력체계 구축 •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확대 • 소규모 기관 차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운영 기반 확보 • 공공성 강화
지역거점형 운영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공동육아 및 돌봄 네트워크 연계 •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 • 정주 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거점형 운영체계는 단순히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부모교육, 공동육아 지원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내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안된 운영모델은 유보통합 정책 방향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능적 연계를 통해 영유아의 연속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지역 내 공공 교육·보육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모델은 기존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공간적 통합, 보육전문성 강화, 행·재정 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거점형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영유아의 교육·보육 접근성 향상과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인구감소지역 영유

아 교육·보육 운영모델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모델

V.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모델 개발 방향을 토대로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운영모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 공공 중심의 재정지원 확대, 보육전문성 강화, 단계적 시범운영 추진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 인구감소지역 특성을 반영한 법·제도 개선

인구감소지역의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모델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존 유아 교육 및 보육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보육체계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어 시설 기준, 교직원 자격, 운영시간 및 재정지원 체계 등에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유치원 시설을 활용한 영아

반 운영 시 교사 배치 기준, 급·간식 제공 기준, 안전관리 체계 등에서 제도적 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운영 특례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4조는 인구감소지역 공립병설유치원에서 영아반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세부 운영지침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에 적용 가능한 운영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설 기준 완화, 영아반 운영 특례, 교직원 자격 인정 범위 확대 및 통합 운영 지침 개발 등을 포함한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유보통합의 취지에 발맞추어 영아반의 보육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영아보육 및 유치원 교사 경력을 모두 갖춘 교사를 영아반에 우선 배치하는 제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2. 공공 중심의 행·재정 지원체계 구축

인구감소지역은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해 기관 자체 운영만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교육·보육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병설유치원 내 영아반 운영을 위한 환경개선비 지원이 필요하다. 영아 전용 화장실 설치, 안전시설 확충 및 교재·교구 구입 등 초기 시설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영아 보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육교사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원 중심 지원방식은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 수가 적더라도 지역 내 교육·보육 접근성 확보를 위해 소규모 운영기관에 대한 차등적 재정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분담체계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보육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영아 보육은 발달 특성상 개별적 상호작용과 건강·안전 관리가 중요하므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모델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

해 보육전문성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영아반 운영 교사를 대상으로 영아 발달, 애착 형성, 부모상담 및 응급상황 대응 등에 관한 전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산어촌 및 도서지역의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간호사, 특수교사, 상담전문가 및 아동발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순회형 전문지원단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대학과 연계한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역시 장기적인 전문성 확보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량 중심 연수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4. 지역 맞춤형 단계적 시범운영 확대

인구감소지역은 지역별 영유아 규모, 생활권 구조 및 교육·보육기관 분포가 상이하므로 획일적인 운영모델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병설유치원 유희교실 보유 지역 및 영아 보육 수요가 확인된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 시범운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시범운영 과정에서는 부모 만족도, 영유아 발달 성과, 교직원 만족도 및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속적인 운영모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우수 운영 사례를 발굴하여 표준 운영지침 개발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전국 확산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통합 돌봄체계 구축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은 단일 기관 차원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 대학 및 지역사회 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병설유치원을 지역사회 거점기관으로 활용하여 영아보육, 부모교육, 공동육아 및 가족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을 넘어 보호자의 양육 부담 경감과 지역 공동체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돌봄 네트워크 구축은 영유아 교육·보육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종합하면,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 공공 중심의 재정지원 확대, 보육전문성 강화, 단계적 시범운영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이 유기

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될 때 인구감소지역 영유아의 교육·보육 접근권 보장과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정책 영역	주요 내용	세부 추진 과제	추진 주체
법·제도 개선	인구감소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기반 영아반 운영 특례 마련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연계 운영지침 개발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유치원에 한정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 기준 신설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재정 지원체계 구축	공공 중심의 안정적 재정지원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반 운영 환경개선비 지원 정원 미달 시에도 최소필요지역 인건비 100% 예외 지원 소규모 기관 차등지원 기준 마련 교육청-지자체 재정 분담체계 구축 	교육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보육전문성 강화	영아 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반 담당교사 전문연수 운영 순회형 전문지원단 구성 및 운영 지역 대학 연계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원거리 지역 순회형 아동발달·간호 전문지원단 파견 및 교통비 보조 	교육청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대학
단계적 시범운영 확대	지역 맞춤형 운영모델 검증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우선 선정 병설유치원 유휴교실 활용 확대 운영성과 및 만족도 평가 실시 우수사례 발굴 및 표준 운영지침 개발 	교육부 교육청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통합적 돌봄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청-지자체 협의체 구성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계 강화 부모교육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구축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사회기관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재정지원뿐 아니라 전문성 강화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의 영유아 교육·보육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헌고찰, 정책분석 및 국내외 사례분석을 토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모델과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특히 공립병설유치원의 유휴공간 활용, 영아반 운영, 보육전문성 강화, 지역거점형 운영체계 구축 및 공공 중심의 행·재정 지원체계를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유보통합 정책과 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을 연계한 실천 가능한 운영모델을 제안함으로써 영유아 교육·보육 접근권 보장과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인구감소지역은 영유아 인구 감소와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감소, 어린이집 폐원 증가 등으로 인해 교육·보육 서비스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확대는 영아 돌봄 공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영유아의 교육·보육 접근권 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로 확인되었다. 반면 일부 공립병설유치원에서는 유휴교실이 발생하고 있어 기존 공공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운영방안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에서도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통합형 교육·보육 운영체계가 지역 내 돌봄 공백 해소와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인정어린이원과 핀란드의 통합형 영유아 교육·보육체계는 교육과 보육 기능을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국내 사례 역시 학교 및 유치원 시설을 활용한 복합화 운영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모델의 핵심 요소로 공립병설유치원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영아반 운영,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능 연계를 기반으로 한 상생형 운영체계 구축, 보육전문성 지원체계 강화, 지역사회 연계를 기반으로 한 지역거점형 운영체계 구축, 단계적 시범운영 및 성과 확산 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의 논의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김은설 외(2021)은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신나리와 이경옥(2021)은 유보통합 관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협력모델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선아와 김혜진(2023)은 인구감소지역 유아교육기관 운영 유형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운영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

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영아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운영체계와 정책 과제를 통합적으로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특히 본 연구는 유보통합 정책의 방향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을 연계하여 공립병설유치원을 활용한 영아반 운영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4조를 기반으로 실제 정책 적용이 가능한 운영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교육·보육 접근성 향상뿐 아니라 공공교육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감소지역의 영유아 교육·보육 문제는 단순한 기관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정책 과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보통합 정책은 행정체계 통합을 넘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운영모델 개발과 연계되어야 하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능 연계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셋째, 공립병설유치원의 유휴공간 활용과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은 교육·보육 접근성 향상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문헌고찰, 정책분석 및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실제 운영 현장의 요구와 운영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다양한 유형과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립병설유치원 영아반 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운영기준과 교원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지역별 인구감소 유형을 고려한 차별화된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효과를 비교·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학부모, 교직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운영모델의 타당성과 정책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향후에는 운영모델 적용에 따른 영유아 발달, 부모 만족도, 교사 전문성, 지역 정주여건 개선 효과를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모델 개발은 단순한 보육 공백 해소를 넘어 영유아의 교육·보육 접근권 보장과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라 할 수 있다. 향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보육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2023). 늘봄학교 지원 및 학교복합시설 추진 보도자료.
- 교육부(2024). 유보통합 추진방안.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25a). 유아교육통계 2025.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25b). 보육통계.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26. 4. 27.). 우리 지역에 필요한 유치원·어린이집 정보를 한눈에.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597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6년 5월 9일 인출.
- 관계부처합동(2024).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교육·돌봄 지원 강화 방안. 대한민국정부.
- 김경미(2024).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원장의 인식 연구. **부모교육연구**, 21(3), 111-134.
- 김은설·이정림·최윤경(2021).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체계 개선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종해(2020). 지역소멸 위기와 공공보육의 역할.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4), 1-23.
- 도미향·김응자(2026). 공공성 관점에서 본 유보통합 정책의 구조적 쟁점과 개선 방향. **교육코칭연구**, 2(1), 5-23.
- 도미향·김응자·김상옥·유지연·이경주(2021).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표준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 **부모교육연구**, 18(1), 43-63.
- 도미향·임화정·민경아(2023). 경기도 0세아전용 어린이집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부모교육연구**, 20(3), 43-61.
- 박선영·정영희(2022). 농산어촌 지역 영유아 교육·보육기관 운영 실태와 과제. **유아교육학논집**, 26(5), 87-112.
- 보건복지부(2025). 보육통계 2025. 보건복지부.
- 신나리·이정옥(2021). 유보통합 관점에서의 영유아 교육·보육 협력 모델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26(2), 55-78.
- 이윤경·서문희(2020). 저출생 시대 농어촌 보육정책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선아·김혜진(2023). 인구감소지역 유아교육기관 운영 유형 분석. **유아교육연구**, 43(1), 101-128.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5). 보육통계 자료집.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최혜진·손재선·김지민(2025). 지역 인구감소 위험에 따른 필수보육시설 지원방안 모색: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2025). 주민등록인구통계. 통계청.
- 통계청·여성가족부·교육부(2025). 돌봄 취약가구 현황 2025. 통계청.
- 행정안전부(2025).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 2025. 행정안전부.
- 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2022).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Finland. 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2023). Certified center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Japan. MEXT.

Nakamura, Y.(2020). Integrate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14(3), 1-15.

OECD(2021). Starting Strong VI: Supporting meaningful interaction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f47a06ae-en>

OECD(2022). Education at a Glance 2022: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3197152b-en>

UNESCO(2022). Right to pre-primary education: A global study. UNESCO.

Abstract

Policy Directions and Tasks for Develop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Models in Population-Declining Areas

Do, Mi-Hyang^{*} · Paik, Youngsuk^{**} · Kim, Eung-Ja^{***}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 operational model and propose policy direction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in depopulated areas. Previous studies, policy documents, legislation, administrative statistic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were analyzed. The findings showed that declining child populations and the increasing closure of childcare centers have reduced access to ECEC services, resulting in growing care gaps for infants. Meanwhile, unused spaces in public kindergartens were identified as valuable resources for expanding local ECEC servic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an operational model that utilizes vacant kindergarten spaces for infant classes, strengthens collaboration between kindergartens and childcare centers, supports childcare professionalism, and establishes a regional hub-based operational system. It also suggests policy measures, including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expanded public funding, workforce support, and community collaboration. This study provides a practical operational model to improve access to ECEC services and promote the sustainability of depopulated communities.

Keywords: depopulated areas,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operational model, areas without childcare centers, unused space in public kindergartens with attached kindergarten classes, regional hub-based service system

*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wangju Women's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